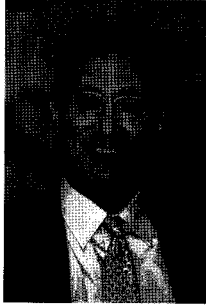


“효율관리제, 업계와 소비자 우대 정책지원 필요”



KEA 전상헌 부회장

“효율관리제도는 제조업계에는 고효율제품 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효율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제는 업계와 소비자의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앞서 자발적으로 고효율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제조업체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대기전력 경고마크 부착,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개별소비세 부과 등 가전 제품에 대한 정책에 규제적인 측면이 우세한 반면 기업이나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우리나라와 가전제품 판매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국가에너지관리·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정부예산 3억달러를 투입해 절전형 가전제품 구매 시 50~200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정부예산 2964억엔을 들여 에어컨·냉장고·디지털TV 등 에너지 절약기준 1등급 또는 2등급 모델 구매 시 제품가의 5~1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위주의 제도가 자발적인 고효율기기의 보급이 아닌 기업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세금을 더 물리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국내에선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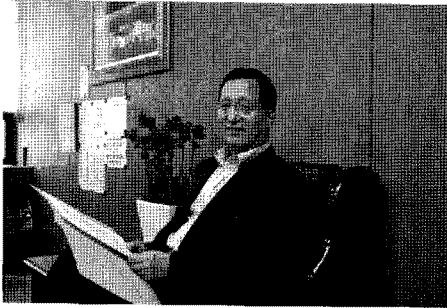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효율가전제품 생산·수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해 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상헌 부회장은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냉장고·세탁기·TV·PC 등 에너지효율 상위 제품을 대상으로 5~10%의 보조금 지원 또는 부가세를 감면하는 등 고효율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프론티어 정책과 연계해 정부의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효율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가격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 부회장은 또 “선진국과 같은 고효율기기 생산기업·소비자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에너지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업계와 소비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기준 변경·강화로 기업이 에너지효율 전략 수립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업계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거친 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면 기업의 체계적인 R&D 투자 및 제품생산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0 국제 지식재산권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10억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102.6건, 연구개발비용 100만달러 당 특허출원 건수는 3.3건으로 특허 생산성 세계 1위다. 특허출원 절대 규모는 2005년 이후 4년 연속 미국과 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R&D 활동에 있어서 실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중 외국 연구자를 포함한 출원 비율은 전체 국제출원의 5.4%에 그쳐 세계 1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200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특허 휴면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휴면특허가 갈수록 늘면서 유지비용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 기업이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포트폴리오 및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재권 획득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근 표준특허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3D TV, 차세대 RFID 등 주요 IT 분야의 표준안과 특허를 분석, 표준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원천인 기술 분야의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 로드맵 구축을 통해 표준특허 획득이 가능한 R&D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권을 선점해야 한다. 둘째, 특허소송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특허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책임보험(Patent Liability Insurance) 및 특허권행사보험(Patent Pursuance Insurance)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허침해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도 지식재산 수출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 수출보험은 외국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일본 업체로부터 도입한 지식재산의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본 기술이전업체의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셋째, 지식재산 활용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유동화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등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 권리가 유동화 자산으로 적합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시기의 추정이 용이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권리 부인 가능성이 낮은 지식재산권이 유동화 자산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넷째, 국제특허분쟁이 빈번한 해외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강한특허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한특허는 기업의 기존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 수립 즉 미래기술 개발, 라이선싱, M&A 등 기업의 특허경영 전략과 R&D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나아가간다면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기술 강국에 이어 지식재산 강국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